

2023.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 결과 공개

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공개합니다.

2023. 12. 18.

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

○ 심 사 일 : 2023. 12. 18.

○ 심사내역

퇴직 당시		취업(예정)		심사결과	결정사유
소속 기관명	직위 또는 직급 (퇴직시기)	업체 (직위)	취업(예정)일		
인천광역시	소방장 (2023년 6월)	(주)아주관리 (방재실장)	2023년 10월	취업가능	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
인천광역시	소방경 (2020년 12월)	(주)맥서브 (관리팀장)	2022년 12월	취업가능	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
인천광역시	지방시설사무관 (2021년 12월)	에이제이대원주 (관리사무소장)	2023년 1월	취업가능	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
인천광역시	지방공업주사 (2022년 12월)	(주)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 (이사)	2023년 1월	취업가능	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
인천교통공사	경영본부장 (2021년 10월)	인천교통공사 (안전경영본부장)	2021년 11월	업무내역서 위반사항 없음	법 제18조의2제2항 위반사항 없음
인천교통공사	영업본부장 (2022년 11월)	송의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(부원장)	2023년 9월	업무내역서 위반사항 없음	법 제18조의2제2항 위반사항 없음

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유형 】

- 취 업 가 능 :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·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
- 취 업 제 한 :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·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
- 취 업 승 인 :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(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)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
- 취업불승인 :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
- 업무취급승인 : 심사신청자가 재직 중 취업예정기관과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나, 해당업무 취급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가능

【 관련 법령 】

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(업무관련성 판단근거)

-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·장려금·조성금 등을 배정·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
- ②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·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③ 생산방식·규격·경리 등에 대한 검사·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④ 조세의 조사·부과·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⑤ 공사,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
- ⑦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업무
- ⑧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

(시행령 제32조제2항)

□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(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)

-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.

-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(취업승인 사유)

- 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
- ② 직제와 정원의 개정·폐지,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④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(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)로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
- 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·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
-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,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- ⑧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·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- 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·자격증·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